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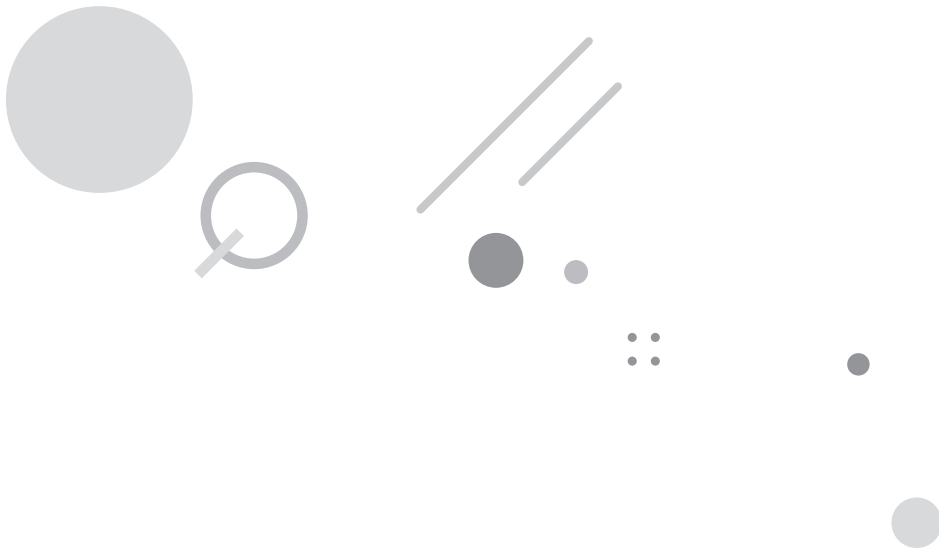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후원 ▶  행정안전부

주최 ▶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축 사】 김 대 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前 노동부 장관.....	5
-------------	---------------------------	---

【주 제】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

【주 제 발 표】

김 태 기	명예교수	7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문】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21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이 재 모	교 수	27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대 광	청 년	33
	(챗터서울 대표)	
이 형 준	본부장	39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 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45
-------	------------------------------------	----

프로그램

1 부

사회 :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 이 정 속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4) 축 사 김 대 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前 노동부 장관
- 5) 단체기념사진 모든 참석자

2 부

사회 : 이 정 속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주제발표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토 론

..... 김 주 섭 본부장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김 대 광 청년 (취업 후 퇴사, 창업)

.....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 김 태 기 명예교수

축 사

오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마련한 의미 있는 토론회에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협력단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모쪼록 이 토론회가 우리 사회를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반가운 것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지 이슈들이 산적한 데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 선진 복지사회의 맥락에 배치시켜주셔서, 경제노동 분야에 종사해 온 저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인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야말로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제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고학력인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풀이 죽어가고 급기야는 희망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역동성을 잃어가면서 신규진입을 힘들게 하여 많은 청년들이 일시적인 비정규직 취업과 실업의 회전문을 드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이 활기를 잃으면 나라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능력과 에너지가 소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선진 복지사회는 한갓 구두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침 오늘 이 토론회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유용한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 환

인하대 명예교수/ 前 노동부 장관

[주 제 발 표]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졸

미국아이오와대학원 박사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1. 청년 일자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설 수밖에 없는 처지, 실업은 소득 상실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에 처하게 만든다.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 활동의 후퇴, 재정의 악화, 사회불안의 문제를 일으킨다. 실업은 아니지만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 저고용도 실업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자리의 공급이 수요보다 작기에 경쟁이 따르지만 노력해도 경쟁의 무대에 올라서기조차 힘든 신세, 실업과 저고용에는 기회의 공정성을 가로막는 기울어진 제도의 문제도 깔려있다. 일자리대통령을 표방한 정부는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잃었고, 노동존중은 정치적 선전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를 또 기업의 투자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앞세운 정책은 실업과 저고용 그리고 일할 기회의 불균형을 키웠다. 일자리정책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공공단기아르바이트사업으로 일자리 숫자를 부풀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채용비리를 일으켰다.

우리나라 청년은 고실업-저고용에 처해있다. 다른 연령 계층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하다. 청년에게 유리한 신기술 일자리는 공급되지 못하고, 일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배우지 못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어려워졌고 진입을 하더라도 자리 잡기가 힘들어졌다.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특이하다. 세대에 따라 실업률의 차이가 커서 청년세대는 부모세대(45-54)보다 실업률이 4.6배 많다(독일 노동경제학연구소(IZA), 2013). 또 고학력 실업과 저고용이 심각하고, 취업도 교육도 훈련 중이지 않은 사실상 실업자인 니트(NEET)가 많다. NEET 비율이 15-29세는 2015년 기준 18%로 OECD 평균(15%)보다 약간 높지만 학력에 따라 차이가 크다. 고등학교 미만은 7% 정도로 OECD평균 36.1%보다 훨씬 낮고 반면, 대학이상 고학력자 비율은 42%로 OECD평균 16.5%보다 훨씬 높다. 대졸이 다수인 25-29세 청년층의 비중은 1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2018년 기준 7.8%지만, 실업자에서의 비중은 21.6%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국 중에서 1위로 가장 높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위기 이후 청년 일자리문제는 더 악화되어왔다. 청년 일자리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정책은 노조 등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대로 실종되었다. 오히려 정년 연장 등 청년층의 일자리를 악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청년의 불만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조금 등으로 무마했고, 급기야 소득주도성장으로 청년 일자리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코로나19의 충격도

청년층이 다른 계층보다 더 컸다. 실업과 저고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실제 고용상황에 가까운 확장실업률을 보면 청년층(15-29)은 2021년 2월에 통계 작성 2015년 이후 최악인 27%를 기록했다. 4월에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5%, 고용율도 1%포인트 늘었지만, 청년층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취업자 증가의 2/3은 여전히 60대 이상이었고, 15-29세 취업자도 증가했지만 그 중 70%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60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고용율의 증가는 60대 이상이 1.5%포인트인 반면, 25-29세는 0.4%포인트였고 다만 20-24세는 급조된 정부의 단기일자리지원 사업으로 3.1%포인트 급등했다.

청년층은 「고실업-저고용」에다 「저 소득-고 부채-불평등」로 고통 받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 8년간(2012-2020)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5% 증가했지만, 20대만 유일하게 부채가 171% 폭증했고 순자산은 6% 감소했고, 수준은 전체 평균의 28%에서 20%로 추락했다. 통계청의 2020년 3분기 가계 동향조사결과를 보면, 부채증가율은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2배 이상 컸고 반면, 근로소득은 정반대였다. 근로소득이 39세 이하는 4.3%, 40-49세는 1.3% 감소했고 반면, 50-59세 2%, 60세 이상은 5%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청년층의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8.5% 늘어 다른 연령층(6.5%)보다 컸다. 또 청년층 차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221.1%로 50대에 이어 두 번째지만, 상승폭은 14.9%포인트로 가장 컸다. 청년층은 불평등도 커져,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2021)에 의하면 지니계수가 29세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저 소득-고 부채-불평등」은 청년을 절박하게 만들었다. 청년은 근로소득의 감소와 저소득층화를 자산소득으로 채우려 했지만 스트레스만 커졌다. 정부의 부동산규제강화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집 장만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늘면서 주식투자와 암호 화폐에 몰렸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회를 놓칠까 불안한 마음으로(FOMO) 신용대출로 빚을 내어 투자하는 ‘빚투’와 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하는 ‘영투’는 청년을 상징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주식시장의 신규 투자자는 20대가 대부분이고, 암호 화폐 투자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2/3은 20-30대 젊은 층으로 추산된다. 미래가 불안한데다 투기에 가까운 위험자산에 대한 시간을 들이면서 청년은 건강까지 위태로워졌다. 건강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상반기에 자해로 진료를 받은 전체 건수가 36% 증가했는데, 20대는 80%, 30대는 87%로 훨씬 컸다. 우울증 진료건수도 20대가 28%, 30대는 14% 증가했다.

2. 청년 일자리문제, 왜 악화되었나?

일자리문제는 고실업-저고용, 저임금-저생산성, 저소득-불평등 그리고 고비용-저효율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실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찾거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실업이 발생하거나(마찰적 실업), 임금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균형에 도달하도록 떨어지지 않아 발생하거나(구조적 실업), 성장이 둔화되어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경기적 실업)한다.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구인자가 요구하는 스킬과 구직자가 가진 스킬이 불일치하거나, 실업급여 등 복지지출이 구직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 때 많아진다. 구조적 실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고임금정책(효율성 임금)을 강화하거나 정부가 노조법, 고용보호법, 최저임금법 등(법제도)을 강화할수록 커진다. 경기적 실업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투자가 줄거나 세금이 많아져 소비가 줄어 고용창출이 어려워질수록 그 폭은 커지고 오래 지속된다.

청년 일자리문제는 나라에 따라 제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의 경우처럼 선진국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나라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 모두 악화되어있다. 마찰적 실업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로, 구조적 실업은 노동제도의 경직화로, 경기적 실업은 반 기업적 정책으로 커졌다. 반면,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이 발달된 나라, 노동제도가 유연한 나라, 친 기업적인 나라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작다.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악화는 제도적인 문제다. 청년 일자리가 작았던 나라가 심각한 나라로 바뀌었고, 청년 일자리의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로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이 후퇴했고, 노동제도가 경직화되었고, 반 기업 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둔화되었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갔지만 고용율은 그렇게 늘지 않았고, 노동기본권은 강화되었지만 취약 근로계층은 늘었다. 게다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외국으로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많아졌다.

2-1. 노동시장과 단절된 학교와 교육정책

청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연령층이다. 그만큼 마찰적 실업의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은 지식과 스킬 등 인적자본을 키울 뿐 아니라 협력과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스킬이 바뀌고 신기술의 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현

상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스킬이 더 중요해진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암기 교육은 인지적 스킬을 키우기 어렵게 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연 등을 중시하는 폐쇄적인 사회적 자본을 키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의 강화, 학생의 소질에 부합하는 교육선택권의 확대,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이 강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교육정책은 입시제도에 매달렸고 입시 중심의 교육은 사교육비 지출만 늘리게 만들었다. 또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을 OECD 국가의 상위권에 속하도록 늘렸고 교원의 급여도 높였지만 공교육은 황폐화했다.

지난 4년의 교육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완전 역행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단절을 키웠고 반면, 교육에 대한 신뢰는 떨어뜨렸다. 직업교육에 필수적인 기업에서의 현장학습을 못하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은 더 어려워졌다.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이 되는 인턴 제도를 억제함으로써 대학 졸업생도 취업이 어려워졌다. 반면,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금 등 소득지원에 치중함으로써 구직활동의 의지를 약화시켰다. 학력주의를 타파한다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면서 취업을 위한 사교육까지 더 활개를 쳤다. 교육이 인적자본을 키우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경력직 채용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는 높아져 노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의 취업은 더 어려워졌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면서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등 공공부문 취업 준비에 청년이 몰리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채용비리를 불거지게 만들고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해쳤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자 고령층처럼 공공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불만을 달래어왔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올라가고 직업교육참가율은 떨어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바뀌었다. OECD의 교육정책보고서(2016년)에 의하면 대학진학률이 2016년 기준 70% 중반으로 높은 반면,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18%로 OECD평균(44%)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대졸자의 학력과 전공의 일과의 불일치가 크다. 관련 연구(2007)에 의하면 교육 불일치가 24%, 직무 불일치가 33.8%다. 최근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대학 졸업자는 323만 명, 전공별 졸업자 비율은 사회계열(28%)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25%), 인문계열(12%), 자연계열(11%), 예체능계열(11%), 의약계열(11%), 교육계열(5%)의 순이다. 그러나 취업률은 의약계열(84%), 공학계열(67%)이 높고 예체능계열(62%), 사회계열(61%), 자연계열(60%)이고 인문계열이 55%로 낮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취업률은 여정보다 남성이 높고, 여학생은 학점에 집중하고,

남학생은 구직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 공학계열의 경우 전공자가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고 반면, 인문 계열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가계지출의 8% 정도를 사교육에 들이지만, 사회생활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고 그중에서 60% 정도만 정규직이 된다.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한국이 38%로 OECD 평균 (55%)보다 훨씬 낮다(OECD 교육정책보고서, 2016년). 학력 간 임금격차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2019)의 분석을 보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격차가 좁혀지거나 확대되어왔고, 격차의 원인은 숙련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기인하며, 2008년 이후 임금프리미엄이 감소했다. 임금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교육의 질은 올라가지 못했다. 그 지표 중의 하나인 중도탈락률을 보면 한국은 대학에서의 중도탈락률이 10%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OECD 국가의 평균은 30%로 3배 높고, 미국은 거의 5배 높다(OECD 교육통계, 2010). 교육의 부실화로, 세계경제포럼(2015년)에 의하면,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조사 대상 124개국 중 1위지만 숙련인력 확보의 용이성은 73위로 하위권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OECD의 근로자 숙련 비교조사(2016)에서도 한국 근로자들은 문제해결능력에서 29위로 매우 낮다.

2-2. 기득권 보호에 치중한 노동법과 노동정책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노조가 투쟁적일수록 실업률이 높을 뿐 아니라 청년 실업률은 평균보다 더 올라가 격차가 커진다. 과도한 최저임금은 청년 등 저 숙련 근로자일수록 고용이 더 줄어들게 만들고, 과도한 고용보호는 신규채용을 기피하게 만들어 청년이 일할 기회가 적어지게 만든다. 또 노사의 힘의 불균형은 고용안정에 치우쳐 기술혁신을 더디게 하고 생산성은 떨어뜨리고 임금만 올라가게 만들어 노동시장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관계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 분석 연구에 의해서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청년 일자리문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해왔고, 고용보호법이 강화되어왔고, 노사관계법은 노사의 힘의 불균형을 키워왔다.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이 청년실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한국은행, 2018)보면, 한국은 고용보호법의 강화와 노조의 힘의 강화로 청년 실업이 악화했을 뿐 아니라 그 충격이 오래 지속되어 청년이 나이가 들어도 실업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년의 노동정책은 청년 일자리문제를 악화시켰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였고, 사람중심경제라며 고용보호를 강화했고, 노동준중사회를 만든다며 노조의 투쟁과 노사의 힘의 불균형을 부추겼다. 여기에는 복지적 노동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한다고 노동법을 바꾸면서 노조의 특권만 강화했고 글로벌 기준과 어긋나는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방치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했지만 반대로 되었다.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로 고용을 줄게 만드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은 중단시켰고, 정년연장으로 인건비를 키워 신규채용이 줄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정규직의 위험회피에 따른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활용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이러한 퇴행적 노동정책으로 청년은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예산을 대폭 늘려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사업을 강화했지만 성과는 그때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청년의 일할 기회를 줄였다. 노동시장은 고용안정과 고임금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정규직인 10%의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90%의 근로자로 나누어졌고, 청년은 10%가 누리는 장벽에 막혔다. 노동제도의 경직화와 노조 중심의 정책으로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1990년대 초반 40%에서 10%로 줄면서 청년의 대기업 취업기회는 1/4로 감소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80%에서 50%로 벌어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는 커졌다. 노동시장의 대 변화로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졌고 비정규직으로 출발했다. OECD의 한국의 생애노동 분석(2018)을 보면 평균적으로 입사는 30세 전후, 주된 직장에서 퇴직은 50세 전후로 빠르고, 퇴직 후 자영업·임시직 등으로 일하다가 노동시장 은퇴는 70세 전후로 늦다. 현재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30%로 OECD 평균(60%)의 절반이고, 연령과의 관계는 OECD 평균과 반대로 역U자 형태다. 반면, 6개월 이하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은 반대로 30-34세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인다.

경제민주화 덕분에 노조는 힘이 세졌지만 노조의 혜택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돌아가 양극화가 커졌다. 노조에 가입한 10%의 근로자는 고임금·고복지에다 고용보호를 누리고 이에 따른 부담은 나머지 90%가 지는 구조가 되었다. 민간 부문과 공무원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민간은 10% 이하, 공공은 70%에 가까워 7배 정도 차이가 난다. 민간만 놓고 보면 사업체 규모가 1,000인 이상이면 조직률이 72%, 300인 이상이면 57%이지만 30인 미

만은 0.3%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67%가 30인 미만에서 일하고 300인 이상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배 차이가 나고(2014년),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2019년). 민간과 공공,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의 격차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조합원여부는 노동시장에서 신분의 문제가 되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고용관계와 임금체계는 그 부담이 결국 청년에게 돌아간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20)를 보면 대기업·정규직·조합원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비조합원(2.3년)에 비해 약 6배 길다.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정규직·조합원은 424만 원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비조합원(152만 원)보다 2.8배 높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의 운영은 100인 미만 기업이 15.8%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60.9%로 4배 많다. 호봉제 때문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한국은 4.39배로, 덴마크(1.44배) 등에 비해 매우 크다.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 격차를 더 벌린다. 한국은행의 연구(2018년)를 보면 기업 규모에 의한 임금 프리미엄은 고정적인 임금 기준으로 29.35%이고, 성과급까지 고려하면 44.03%로 더 벌어진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기업 규모에 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덴마크는 0.6%로 거의 없고,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스페인도 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부문의 임금고용관행은 노동시장을 더 경직화했다. 공공부문은 고용안정을 노동법 이외에도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보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공공부문의 임금프리미엄도 훨씬 많다. 노동조합 조직률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은 70%에 근접해 민간부문보다 7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이는 미국(5배), 프랑스(3배), 노르웨이(2배)보다 훨씬 크다. 민간부문은 기업 규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1,000인 이상은 70%를 넘고, 100-299인은 15%, 고용비중이 67%나 되는 30인 미만은 0.2%로 사실상 제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기업규모별 조합원 분포를 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평균 60%로 한국(90%)보다 훨씬 낮다. 공공부문의 임금프리미엄은 우리나라는 30%정도로 유럽의 평균(15%)보다 두 배 정도 많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채용과 임금의 결정이 더 경직적이다. 선진국의 공무원은 선발 권한이 해당 부처에 있고 근로계약이 다양하고 직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입사시험

을 통해 일률적으로 선발하고 임금은 호봉제에 따라 올라간다.

2-3. 고용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는 규제정책

일반적으로 기술혁신과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는 실업률이 낮다. 기술과 시장의 변화는 고용조정을 수반해 한편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규제는 환경변화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린다.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규제가 많은 나라는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파괴보다 작고 실업률이 높아 규제와 실업률은 정(+)의 관계를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실업률의 증가를 우려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세계적인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에 특집으로 일자리 호황을 다루었다. 코로나19 직전에 미국은 물론 독일이 최저실업률로 일자리 대호황을 누리고 반면, 프랑스와 남부 유럽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로 규제의 차이를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로 노조의 힘은 커지고 반면,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왔다. OECD 분석(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많고, 특히 서비스업의 규제는 제조업보다 4배가 많으며,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지난 4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1대 국회 들어와 더 심해져 규제입법은 매달 200건이 되었고 처벌입법도 강화되었다. 대기업을 적폐로 취급하고서 공정경제를 내세우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강화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국회가 규제강화에 매달린 이유는 불신에 있다. 정치가 불신을 받을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규제 강화의 이유로 사회 불안을 이용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규제 강화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신뢰가 낮으면 분쟁이 많아지고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은 규제가 정부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도 규제강화를 원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또 불신이 크면 재분배 요구가 커지고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결국 정치 불신과 사회 불안이 일자리를 악화하게 된다. 문화체육부의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일자리를 가장 원하고 반면, 국회의원을 가장 불신하고 입법부에 대한 불신은 행정부와 사법부보다 크다.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국내외에서 제기되어왔다. 서비스업은 고용비중이 70%를 훌쩍 넘을 정도로 커졌고, 중소기업의 80% 정도가 서비스업에 속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규제완화가 필수적이기에 더욱 그랬다. 한

국은행에 의하면 규제가 10% 줄면 총 요소생산성이 0.3%포인트 증가하고 금융 및 의료서비스업의 성장 촉진 효과가 크다. 규제는 자본과 기술 및 이에 따른 두뇌의 해외유출을 일으킨다. 세계은행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GDP 대비 0.9%로 세계 평균(1.4%)과 동아시아태평양국가 평균(2.2%)보다 훨씬 작고 반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2.4%로 세계 평균(0.9%)과 동아시아태평양국가 평균(1.7%)보다 훨씬 많다. 두뇌유출지수(Global Economy)는,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산되어, 지금은 서비스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보다 4배 많다.

규제는 일자리 숫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질도 저하시킨다. 규제는 경쟁을 피하게 만들고 혁신을 가로막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을 일으킨다. 규제의 역설로 대·중소기업과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는 3배로 벌어졌고 저임금 일자리만 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규제로 정부의 대출 보증은 GDP의 4%, 은행 대출에서 비중은 70%, 중소기업대출에서 정부의 신용보증 비중이 15%, 정부의 연구개발지원비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52%를 넘었지만, 생존율은 5% 남짓 높였고 부가가치는 5% 가까이 떨어뜨렸다.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18%, 서비스업 비중은 15%로 제자리걸음해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연구를 보면 수출기업은 내수기업보다 혁신의 성공 비율이 2배 정도 높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도 2배 정도 많으며, 임금수준은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30% 높고, 임금상승 속도도 23% 빠르다. 수출서비스기업은 내수서비스기업보다 혁신의 성공 비율이 2배 높고, 연구개발 투자도 수출서비스기업이 내수서비스기업보다 3배 많다.

3. 청년 일자리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3-1. 교육·노동·복지개혁의 전면적 추진

청년 일자리 악화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모순의 결과다. 전면적인 개혁 없이 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혁을 방치하면 청년 실업률은 남부 유럽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30%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교육, 복지, 노동, 규제, 정부 등 전 방위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청년 실업과 저고용의 일차적인 원인이자 최대 원인인 교육과 노동시장의 단절과

노동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상향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의 공급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도록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의 필요성은 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한 나라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 직업교육개혁으로 청년 실업을 완화했다. 독일은 슈뢰더 총리 당시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노동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혁했다. 초저실업으로 일자리 호황을 누린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일자리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노조를 비롯한 이익단체가 반발하고 반면, 일반 사람은 관심이 적어 정치인들은 개혁을 회피하게 된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선전과 선동에 편승해 오히려 반개혁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개혁이 지연·왜곡되었고,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은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런 문제는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서도 그랬다. 이들 국가는 개혁의 실패로 경제위기에 처했고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대거 떠나 일자리를 찾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 무대와 룰을 바꾸어야 한다. 개혁 주체의 대표성을 높이고 이익단체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이 개혁의 실패와 지체에 처했던 원인도 이익단체가 청년 일자리문제를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는 모순에 있었다.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년의 올바른 목소리가 1차적으로 반영되도록 거브넨스와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개혁을 성공시키는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3-2. 복지·재정 만능주의와 포퓰리즘 탈피

재정으로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는 환상이 떠돌고 있다. 그 환상에는 복지 만능주의의 포퓰리즘이 깔려있다. 재정이 투자가 아니라 소비성 지출을 위한 것 이면 실업은 늘고 국가부채는 쌓여 결국 그 부담이 청년에게 전가된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전면적 무상복지가 진짜 복지고, 복지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별적 복지와 복지의 민간 참여는 배척한다. 기본소득도 그 연장선에 있다. 기본소득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 청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어떤 나라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았다. 복잡한 복지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면 취약계층은 복지 혜택이 줄게 된다. 복지는 재정이 뒤따라야 하고,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있고 효율성이 요구된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스웨덴 등 북부유럽과 독일은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복지개혁을 했다. 일과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복지를 줄이며, 민간 기업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효율성을 높였다.

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복지가 되도록 만드는 개혁이 필수적이다. 복지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산성을 높여 소득이 올라가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가 현 세대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면 재정의 부담은 국가의 부채로 남아 결국 청년이 갚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도 악화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재정이 어느 단계 이상으로 악화하면 재정악화가 실업률을 높이고 실업의 악화는 재정적자를 늘린다. 재정확대는 개인이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할 돈을 정부가 빨아들이고, 실업의 악화는 세수를 감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재정확대와 실업률의 정(+)의 관계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로 확인된다. 규제는 많고,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전형적이다. 재정이 악화되면서 자본이 떠나고 금리가 올라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일자리와 복지 예산이 줄어들어 따라 공공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률이 늘었고, 경기악화에다 자본유출까지 겹쳐 청년 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단계로 들어갔다.

3-3. 일자리 정책 공조와 정부 개혁

복지 포퓰리즘에서 탈피하고 일자리 개혁에 성공하려면 정부 개혁을 해야 한다.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노동, 복지 개혁은 관련 부처의 정책 공조를 요구한다. 부처의 협력은 교육과 노동시장, 일과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만든다. 부처의 협력이 없으면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를 재정에 의지하고, 사업이 중복되어 자원과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다.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은 물론 정부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키우고 정부의 책무성은 떨어뜨려 청년 일자리문제가 방치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자리 개혁을 추진하는데 정부 개혁이 중요해진다. 이것은 OECD 국가의 75%가 교육, 노동, 복지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에 정부 개혁에 나섰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1990년대 스웨덴 등 북부 유럽과 네덜란드가 성공사례로 꼽힌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자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부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했다. 독일은 세계금융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2000년대 초반에 개혁에 성공해 대량실업을 피한 사례로 거론된다.

정부 개혁은 정책간의 공조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넘어서는 문제다. 규제가 많고 정부기관의 힘이 강한 나라는 정부 개혁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 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임금고용 관행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혁하지 않고 일자리 개혁을 하면 실패로 돌아가거나 개혁을 해도 성과가 작아 고용을 늘이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이런 경우로, 정부를 개혁하지 못해 교육, 노동, 복지 개혁에 나설 동력을 잃었다. 스페인은 2010년대 수차례에 걸쳐 노동과 복지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기대한 것만큼 커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처럼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혼합 자본주의체제의 특성을 보인다. 지금 정부 개혁은 실종되었고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가 성행해 일자리 개혁의 동력은 잃어버린 상태다. 청년 일자리 개혁은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향후에 일자리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 개혁으로 솔선수범해야 기업과 노조 그리고 학교 등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토 론 문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 청년일자리 악화 원인에 대해.....

발표자께서 청년 일자리 악화 현황과 원인,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까지 종합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사회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필요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발표자께서 잘 정리하고 있지만, 현재 청년 일자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와 통계는 차고도 넘친다. 하나의 자료를 추가하면, OECD 37개국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청년(15세~29세)실업률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2009년 청년실업률은 8.9%에서 2019년에 8.9% 상승한 반면 OECD 평균은 4.4% 하락하고 있으며, 동 기간 청년실업률 악화정도는 OECD 37개 국가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는 여타 OECD 국가의 경우 청년실업이 평균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그 악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청년실업률은 10%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실업률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고용에 있어서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문제는 비단 일자리 기회가 여타 세대에 비해 적어졌다는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여타 국가에 비해 취업한 청년층의 상대임금이 중장년층에 비해 낮아졌다는 점에서 청년층 삶이 이전 세대에 비해 그만큼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인 OECD국가들에 비해 연공급적 성격이 강해 근속년수 30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비해 3배가 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동일한 기준 하에서 주요국의 경우 2배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의 상대임금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기회 격차, 근로소득 격차는 자연스럽게 자산격차로 이어지게 되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자산시장의 버블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청년층이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자께서 발표한 청년 일자리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년 일자리문제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산업현장과 유리된 교육시장

구조가 청년 일자리문제를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완화되거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청년 일자리문제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고착화, 낮은 조직율에 비해 과도하게 행사되는 노조 권력, 귀족 노조 문제 등.....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게는, 비록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사정 악화의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그 자체로는 약자보호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 문제점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기존의 경직적, 연공서열적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는 IT기술에 익숙하여 직무역량 습득이 상대적으로 우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고, 연공서열 노동시장 문화로 인해 청년층 개인의 직무역량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잠재적 수준에 비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 문제 역시 청년층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교육 불일치, 전공불일치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으나, 전혀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산업 및 노동시장과 괴리된 교육과정의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교육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에 진입하는 것이 거의 모든 청년층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좋은 학력과 각종 (대부분은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젊음을 소진하고 있다. 일단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강력한 노동법과 노조의 보호 하에 평생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게 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들은 여간해서

는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힘든 것이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청소년들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포기하고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각종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입시 성공여부가 상당부분 어떤 사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는지에 달려있다 보니, 소득계층별로 사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는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문제가 되어 온 취업시장에서의 권력에 의한 불공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발달로 산업현장의 직무가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행에 있어서 일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청년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발표자께서도 제시하고 있다시피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방향 - 교육·노동·복지개혁의 전면적 추진, 복지·재정 만능주의와 포퓰리즘 탈피, 일자리 정책 공조와 정부 개혁 - 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향후 일자리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부개혁을 추진하여야 기업과 노조 그리고 학교 개혁에 있어서의 개혁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발표자가 제시한 일자리 개혁의 당위론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추동해 나가야 할 주체적인 세력은 정치권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토론자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정치권의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지는 빈약해 보인다. 청년 일자리문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해결을 위한 전략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확대나 고용할당제와 같은 일시적으로는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사업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치권력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라고 본다. 첫째, 청년층의 정치참여 정도와 수준이다. 기존 정치권에서 청년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는 정치세력을 발견하기 힘들고, 정치권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의 수도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구조개혁 방향과 내용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기

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을 통한 정면 돌파”식의 정책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임시방편적 정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반짝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후자의 방식이 더 선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셋째, 정책 및 개혁의 기술적 문제이다.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혁정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혁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고도의 정책 기술적 작업에 속하며, 상당히 전문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 사회의 결집 가능한 전문적 역량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전방위적 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구성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정치 이념적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분열된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력이 결집 가능한 전문적 역량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정치권력의 청년층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난망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곧 대선정국이 펼쳐지고 한국사회는 또다시 격랑의 정치무대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치열한 공약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갖은 공약이 유권자들을 유혹하려 할 것이다. 발표자께서도 염려하고 있고, 본 토론자도 앞서 밝혔듯이 그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적 정책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크다.

작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본 토론자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포퓰리즘적 정책은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줌으로써 정치권력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겠끔 유도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보며, 지난 수년간 뜻 있는 시민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충분히 쌓아왔기를 기대한다.

토 론 문

이 재 모 교 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前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前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도 위기를 가져와 청년 취업문제는 악화되어 오늘날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오늘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왜 악화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청년(15세~29세)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 해 202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이고, 청년 실업자는 42만 6천명에 이른다. 반면에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가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인력난에 처해 있고, 기업에 취업을 해도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편,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공무원 준비생은 40만 명이 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많은 학생들은 대기업은 물론, 공무원과 공기업을 선호한다. 그 중 실제로 매년 공무원과 공기업 합격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N수하는 경우가 많고 평균 2~3년은 기본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처우적인 면도 있겠지만, 미래의 불안한 심리가 안정한 직장을 선호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2020년도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 50만 373명 중 전문대/4년제 등 대학 진학한 학생은 36만 2888명으로, 진학률은 72.5%이다. 이는 전년도 70.4%에 비해 2.1% 상승한 수치다. 지난 10년간 대학 입학한 N수생은 평균 21.7%로 이를 합치면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진다.

한편, 고학력에 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며, 임시적이고, 요즘 기업은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이나 수시채용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학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 개발과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인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임시적이고 복지포플리즘이라는 비판의 의견도 적지 않다. 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생활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시적인 지원도 긴급 시에는 필요하지만, 잘못되면 의존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을 청년으로 국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968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소득보장제도로 주장하고, 서구유럽에서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잘 실천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는 알래스카 주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석유 자원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당시 제이 해먼드 주지사가 주장하여, 석유 수입의 일부를 자금으로 사용해 1976년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조성하고, 배당은 1982년 1000달러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2008년의 3269달러를 지원했다. 기본소득제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쨌든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임시적이고, 복지포플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셋째, 청년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일찍부터 고교생들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에 진학하는 등 최근 지방대학은 입학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졸업 후에도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지역의 경쟁력 약화와 나아가서 지역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 지방대학 출신 청년 취업문제해결은 단순한 청년 일자리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및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글(본사 시애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본사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 회사가 미국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 대학에서 MOU를 체결하여 양성하고 상호협력하면 지방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중앙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토 론 문

김 대 광 청 년

챗터서울 ChapterSeoul 대표

현) 챗터 코리안(Chapter Korean) 운영 및 대표 선생님

현) 젊은 한국어 교육자 모임 운영자

전) 씨티 캠퍼스(City Campus) CMO/COO

전) (주)코티에이블 커뮤니티 매니저

전) 루트임팩트 IBC 9기

전) 한양대학교 비즈니스랩, 사회혁신랩

전) 한양대학교 국제처 입학팀 인턴

1. 청년 일자리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에 대한 의견

1) 현재의 청년들이 「저소득-高부채-불평등」, 「高실업-저고용」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1-1)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
- 사람들의 니즈 “공정 사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이 오는 사회”

1-2) 모든 문제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문제

- 개인의 저소득, 高부채, 高실업, 저고용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 구조의 문제의 복합적인 결과물
- 모든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해석하고 출발선을 맞추거나 지나친 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 역효과가 생길 수 있음
- 예를 들어, 최저 시급을 높인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가 힘들어지는 수가 생길 수 있음. 실질적으로 개인의 연봉은 변화가 없는데, 최저시급과 물가만 높아지는 효과가 일어남.

2) 왜 청년들은 노력에 비관적인가? 왜 코인을 하는가?

-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요즘 청년들은 노력을 안 한다고 함.
-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직장 내에서 “성장, 가능성” 혹은 “안정성” 두 가지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 “성장, 가능성,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더 일하거나 더 노력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실적을 올리고 싶어 하지만 호봉제, 기업 문화,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한이 생김
- 그래서 직장에서는 딱 주는 만큼만 일하고 빨리 집에서 가서 투잡이나 주식, 코인 혹은 개인 공부를 하는 생각에 칼퇴 문화가 형성
-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조차 현재의 직장들이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 못함. 공공 일자리는 도움이 안 되고, 대기업 근속연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워라밸’이 좋은 직장을 빨리 찾으려고 이직 준비를 함
- 공공 일자리에 대한 인식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 전국 5,000명 정도,

- 6개월 인턴, 185만원 > 그 이후가 없음)
-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 영끌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생각이 머릿 속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내가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현 정부가 확신으로 바꾸어 주고 있음.

2. 청년 일자리문제, 왜 악화되었나? 에 대한 의견

2-1. 노동시장과 단절된 학교와 교육정책

- 대한민국 교육과 취업의 대다수 문제는 대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너무 쉬움
- 대학교가 졸업생을 쉽게 배출하고, 학점을 남발하기 때문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음

1) 교육 기관으로써의 역할

- 대졸자의 학력과 전공의 일과의 불일치가 크다는 말 > 대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다!! > 대학생들이 스펙에 집착하고 기업 인턴 등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됨
- 실질적으로 진로선택과 대학교의 상관관계가 무너짐
- 코로나시대, 대학 경쟁률이 너무 낮음
- 연구 성과도 낮고, 타 사업 수익도 없어서 유지가 힘들다고 함
- 그래서 무의미한 유학생 늘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음

2) 왜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할까?

- 대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무조건 졸업이 가능해서 일단 입학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
- 대학교 졸업이 어려워지면 대학교 입학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됨
- 공부나 연구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무리해서 대학 입학을 시키지 않음

3)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등 문제

- 대학교의 졸업이 어려워지면, 특히 수도권 상위 대학 졸업이 더욱

어려워지면 ‘특정 대학 입학자’가 아니라 ‘특정 대학 졸업자’가 인정을 받게 됨.

- 현재 블라인드 채용이 비판받는 이유 :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학 졸업이 어려우면 노력의 가치가 보여 지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 ‘실력이 있고, 노력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쉬워 짐.
- 좋은 대학 진학에 실패한 사람도 추후 지방 대학에서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면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상위권 대학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 졸업을 못하였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본인이 질 수 있음

2-2. 기득권 보호에 치중한 노동법과 노동정책

-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청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그게 워라벨, 돈, 안정성, 커리어 등.
- 기업 내에서 청년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 생산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만한 대가를 주면 됨 Win-Win > 강성노조 얘기만 들어주고, 노조나 의미 없는 호봉제, 공정하지 않은 성과급지급을 하지 않으면 생산성 높일 수 있음
- 청년들이 52시간 근무를 왜 좋아하나? 왜 열광하나?
- 어차피 회사에서는 열심히 해도 더 안준다는 생각이 있음
- 그래서 빨리 퇴근해서 투잡을 뛰어서 돈을 더 벌거나, 공부를 더해서 더 많이 주는 직장가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인생 경험을 더 하던가 라고 생각.
- 오히려 52시간 근무 때문에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만 손해
- 그래서 기업 생산성 더 안 좋아짐
- 강경노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부정적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

2-3. 고용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는 규제정책

- 기업 규제를 줄여서 기업들이 경쟁 할 수 있게 해야 함.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면 됨.
-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정한 경쟁을 거치고,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그만큼 보상을 구성원들에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 하면 현

재 근속연수 문제나 인재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3. 청년 일자리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에 대한 의견

- 1) 규제 없애고 경쟁력 있는 기업 만들기 (할당제, 52시간 등 최소화하기)
일자리 '양'보다 '질'에 집중하면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기업의 생산성 및 국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더욱 진출하여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 2) 최저시급 낮추기 - 물가와 집값만 잡아도 서민들은 연봉 상승효과를 체감하게 됨
- 3) 대학 경쟁률 강화 및 교육 정상화 - 대학교 안팎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학교가 제 역할을 하면 등록금도 높일 수 있고 대학교도 국내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됨

토 론 문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現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 해소 및 고용+위원회 사용자위원

現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발제해주신 교수님의 문제 지적과 정책방향 제시에 상당부분 공감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급속한 산업 생태계 진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부응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둘러싼 제반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 전반이 합리적으로 새롭게 재설계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계속되며 고착화,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

○ (실업률) 2011년 7%대였던 청년실업률*이 지속 상승하여 2020년 9.0% 기록

* 추이(%) : 7.6('11) → 8.0('13) → 9.1('15) → 9.8('17) → 8.9('19) → 9.0('20)

-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같은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5.1%에 달함(2020년 기준).

* 추이(%) : 21.9('15) → 22.1('16) → 22.7('17) → 22.8('18) → 22.9('19) → 25.1('20)

○ (고용률) 청년고용률*은 2011년 40.4%에서 2019년 43.5%까지 상승했다가 2020년 42.2%로 다소 하락

* 추이(%) : 40.4('11) → 39.5('13) → 41.2('15) → 42.1('17) → 43.5('19) → 42.2('20)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감소폭은 청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남.

※ 20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전년비)

: (15~29세) -1.3, (30대) -0.7, (40대) -1.3, (50대) -1.1, (60대) 0.9

□ 최근에는 청년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이 확대 되는 모습

○ (취업자)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 으며, 2020년 청년층 취업자*가 2019년보다 18.3만명 감소

* 증감 추이(만명, 전년비) : 4.3('16) → -0.1('17) → -0.3('18) → 4.1('19) → -18.3('20)

※ 청년층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80.6%로 전체 연령층(70.0%)보다 높음(2019년 기준).

○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 4.9만명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

* 증감 추이(만명, 전년비) : -9.8('16) → -8.0('17) → -11.3('18) → -10.8('19) → 4.9('20)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들도 증가세(2020년 8.8만명 증가)

□ 발제문에서도 지적하듯 고실업-저고용에 처한 우리 청년들은 코로나19의 상흔까지 더해지면서 고용 여건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에 직면

○ 발제문에 따르면 청년층의 부채는 급증한 반면 근로소득은 감소했고, 자해건수와 우울증 진료건수가 증가하는 등 건강까지 위태로워진 상황

○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기 회복 후에도 경력상실로 인한 임금손실 및 사회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 근로자에 비해 10년간 임금이 연 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KDI, 2017)

□ 現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투입형, 단기 일자리 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 부족

○ 지난 3월 정부는 청년의 취업, 창업,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그러나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대책은 고용창출의 효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기도 어려운 한계를 지님.

* 2021년 총 5.9조원을 투입해 104만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나, 공공 부문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비시장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음.

※ 예컨대 대표 사업인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님.

● 청년디지털일자리 :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임.

○ 지난 3년(2018~2020년)간 약 33% 인상된 최저임금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

행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켰으며, 상법·공정거래법,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면서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됨.

-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약 40%에 그쳤고, 작년보다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약 25%에 불과(경총 조사결과, 2021.5)

□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으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 전환 필요

- 現 노동법 체계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데 치중되어 있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 OECD는 우리나라 상용직 근로자의 개별해고가 다른 국가들보다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되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노동력 재배치가 저해된다고 지적(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2020.8)

-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이미 일자리를 확보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시간,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경영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함.

- ※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 간 실증분석 사례

- ① 고용보호지수 1점 상승 시 청년고용률 5.5%p 하락

- (한국금융연구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 2019)

- ② 노사협력, 임금결정유연성 1점 상승 시 청년실업률 각각 3.7%p, 1.2%p 하락

- (부산대 김현석 교수,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관계 분석, 2020)

-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득권층의 공감대와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매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

진될 만큼 강조되어 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수준*. 이는 정부가 기득권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

*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93.8로 ‘불만족(100이면 보통)’ 수준(전경련,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2020.8)

** 타다(승차공유서비스)는 택시업계,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도입되지 못함.

- 따라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해당 분야의 규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규제를 완화했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면 과감히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강력한 추진력 필요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 『통일박람회』 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출물 모니터링사업
『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부스명: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5년 연속)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10.5~6일)
제5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8.17~18)
제5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11.07)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6년 연속)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6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10.22~24)
제6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10.31)
제1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11.3)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_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_데일리안_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_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_복지뉴스_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3050 _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_대한경제_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_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_백세시대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_뉴스핌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_매일경제_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_실버아이뉴스_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I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gn=news _조선일보_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_복지연합신문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_매일경제_
<http://m.ngonews.kr/120618> _한국NGO신문_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_뉴스핌_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cd436290_16 _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_데일리안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_백세시대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_e대한경제_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 _성남일보_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_충청일보_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_실버아이뉴스_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 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흥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사회: 조종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데일리안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UNET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진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정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선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강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기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흥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규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성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중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소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동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제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미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상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
3. 황남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수)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종훈 기자 (중앙일보)
3. 노대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진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우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승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영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국은 초빙교수 (송실대학교)
2. 최상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12.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도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재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영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11.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운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경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옥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열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찬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병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혜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진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진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은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기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연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신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혜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재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은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태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우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인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경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주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정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양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수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옥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헌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상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경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수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근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은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범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점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종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성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오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동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성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찬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삼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미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태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명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은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정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론자:

1. 박병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태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병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회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정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창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준수 교수(송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명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레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흙플러스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 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원)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학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혜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대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현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명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갯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론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용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회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영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튼).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순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무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헌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준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종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욱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병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창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무성 교수(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토론회

-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2. 멘토링 공감여행 멘토교육

- 일시: 1차 교육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1시 ~오후 2시
2차 교육 2021년 7월6일(화) 오후 1시~오후 3시
- 장소: 광화문 '만복림', 본 연구회 사무실

3.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 일시: 2021년 7월 20일(화) ~ 22일(목)
- 장소: 전남 신안

4. 토론회

- 일시: 2021년 7월 28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

5. 토론회

- 일시: 2021년 9월 2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총재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3)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